

KMI

북한해양수산리뷰

2022년 2호
JUNE 30 2022

발간년월 2022년 6월 30일(2022년 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윤인주 감수 홍성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90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Editor's Note

02

코로나 팬데믹 3년 차, 대내외 정세변화와 대북 접근법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기획 칼럼

03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접경해역 블루데탕트

나용우(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린데탕트 시대의 대북 산림협력

허선훈(전북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소 연구교수)

감염병과 재난대응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홍성걸(해양정책학회 연구위원)

지상중계

22

KMI-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공동 국제학술회의

: 변화하는 동북아정세와 남북한 해양협력의 모색

北 리뷰

36

편견과 현실 그 사이 어느 곳인가 위치한 평양

김태운(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PYONGYANG: A JOURNEY IN NORTH KOREA

리은경(연세대학교)

북한 알기

42

북한 화장품의 최근 변화

채수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北 소식

46

북한 해양·수산 기사 ('22.4~6월)

NK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22.4~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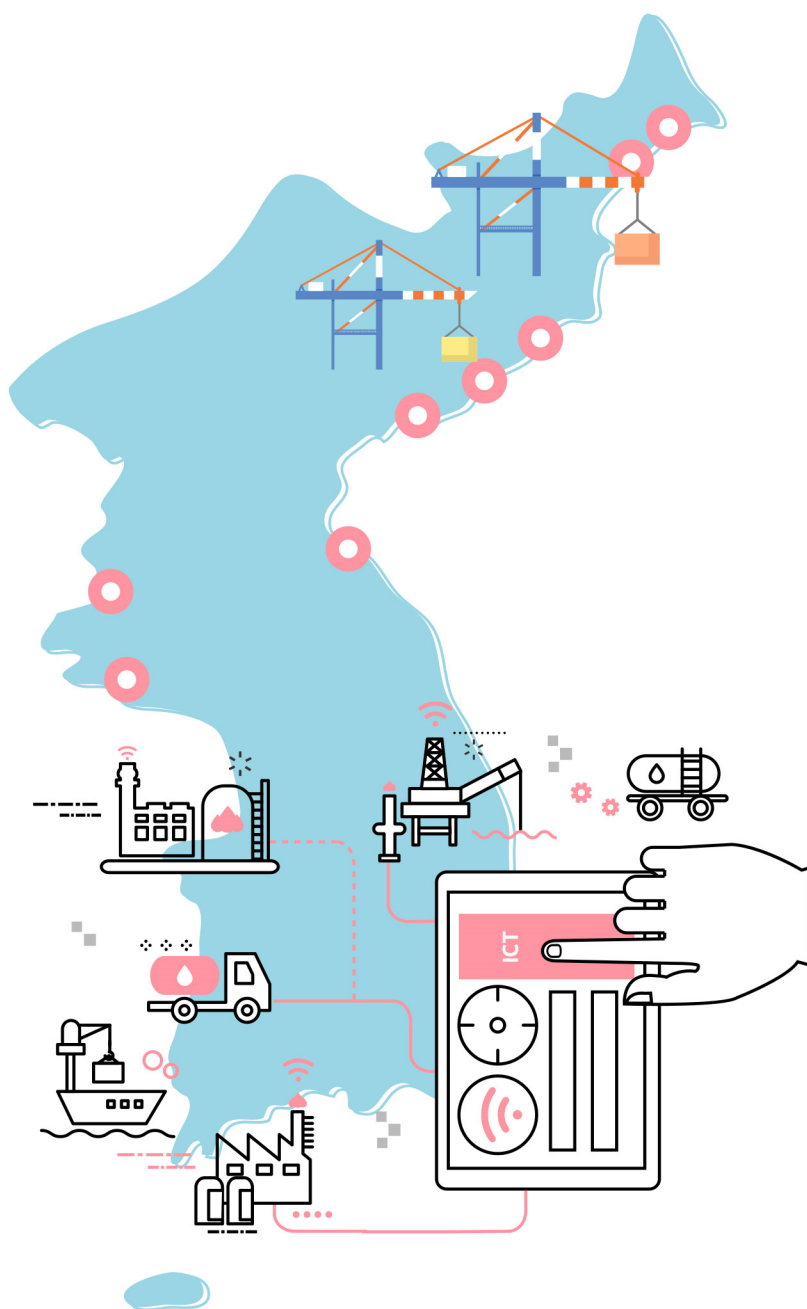
진희권(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원)

북한 수산물

57

김정은 시대 수산업,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상용(데일리NK 공동대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채수란 전문연구원 Tel_051-797-4790, E-mail_9orchid7@kmi.re.kr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상기 전화번호 및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Editor's
Note코로나 팬데믹 3년 차,
대내외 정세변화와 대북 접근법

윤 인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발전한 지 3년째다. 전 세계가 백신 개발과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변이 발생과 면역 형성을 거쳐 이제는 어느 정도 이동과 교류, 일상이 재개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다고 주장하던 북한은 이제야 코로나 환자 발생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안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밖으로는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 안정화를 확인했으므로 여차하면 백신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근저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호는 포스트(post) 코로나 또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대내외 정세 변화와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해본다. 상황이 어쨌거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기준에서 북한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환경, 보건, 재난재해 등 인류 공통의 아젠다는 존재한다. 기획칼럼에서는 그린데탕트와 관련해 간과되고 있는 블루데탕트, 전통적인 그린데탕트의 핵심인 산림협력, 감염병 및 재난대응과 관련한 미래 지향적인 대북 접근법을 차례로 소개한다. 지상중계는 미국, 일본, 중국의 해양전략과 더불어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남북한 해양협력의 방향과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들이 철수하면서 북한 내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닫혔다. 北 리뷰에 소개된 책 두 권은 북한 주재원으로 파견된 배우자를 둔 외국인 저자들이 나름의 시선으로 관찰한 평양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북한알기와 北 소식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및 국내외 언론에 비친 북한의 동향이다. 지난 호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수산물 가격을 소개하면서 이번 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산 부문 변화를 북한에 소식통이 있는 기자의 눈으로 소개한다. 북한이 한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이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기획 칼럼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접경해역 블루데탕트

나 용 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1.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2018년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며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한반도는 2019년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며 평화로의 길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북한은 2018년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노선’으로 전환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상한 경제건설에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결국 북미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되며 남북관계까지도 얼어붙었다.

북한에게 비우호적인 대내외 환경은 북한으로 하여금 2018년 전략노선을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새로운 길’을 언급하는 등 소위 ‘핵경제 병진노선 2.0’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2020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전 세계 국가들은 인력과 물자의 이동을 막는 성벽 높이를 선택했다. 의료기술, 인프라, 의약품 등이 충분치 않은 북한 역시 우선적으로 국경봉쇄를 결정했고,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단절하며 ‘자력갱생’, ‘자강력제일주의’를 기치로 내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정면 돌파 방식으로 국내외 위협들에 대처하였다. 2022년에 들어서며 북한은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18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거듭하고 있으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5월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 성향의 정부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우선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1)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2)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3)남북 간 상호 개방

기획 칼럼

과 소통교류 추진, 4)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5)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역대 과거 정부들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이다. 과거 보수 정부가 종종 남북관계 개선의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던 경험을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드라마가 연출되기를 기대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인가? 향후 남북관계 속에서 실용과 유연성 원칙에 입각해 적용할 수 있는 의제는 남북 그린데탕트이다. 그린데탕트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제시한 개념은 아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했던 구상으로 이번 정부에서 과거의 구상을 한반도의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재창조한 것이다.

2.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

그린데탕트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환경생태분야에서의 협력, 즉 비정치적·비군사적 교류를 통해 남북 간 긴장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남북관계에서 기능주의적 접근을 처음으로 적용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었고, 그 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은 기능주의적 접근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환경·생태를 의미하는 ‘그린’을 처음 활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의 기조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그린 그 자체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 간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그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그린데탕트를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린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기조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상 등으로 표상해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역대 정

기획 칼럼

부들과 정책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다. 5월 3일 발표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남북관계 정상화의 주요 내용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실현 방향으로 미세먼지, 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남북 환경협력의 틀 속에서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의 그린협력이 경제적 측면 혹은 환경생태적 측면에만 집중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그린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및 생명권 등 삶의 질 개선 등 인도주의적 측면(과제 95)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이며, 주민 생활의 일상성에 주목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라는 두 국정과제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범 초기에 이들 과제의 통합적 로드맵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발표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미세먼지, 자연재난을 포함한 그 범위와 수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정책에서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실현가능한 정책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우리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협력을 통한 직접적 이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며,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남한, 북한의 이익 그리고 국제적 지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가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남북 신뢰형성을 통해 그린평화지대화가 구현된다면,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 그린데탕트로 확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역내 국가들을 포함한 그린한반도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린한반도(Green Korean Peninsula, GKP)’의 대전략 하에서 단계별 로드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3. 남북 그린데탕트의 출발: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내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획 칼럼

북한이 현재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폐기하면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교류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북한발 위기 고조의 명분이 약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2, 제3의 유행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의로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다. 2017~2018년 남북관계에서 경험했듯, 남북 간 대화 재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019년 북미 대화가 중단된 이후 북한은 한국 정부와의 직접 교류와 대화는 거부하면서도 국제사회에는 협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 간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대북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의 대북 교류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 추진 시 지자체 및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자율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다면, 우리 정부의 활동범위 및 북한 당국과의 협상 레버리지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이제 남북 당국 간 직접 교류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자유롭고 폭넓은 남북 교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5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되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양국 간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동맹이자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간 협력이 긴밀해짐에 따라,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신안보 차원에서의 한미 공조 확대를 표명한 만큼, 기후변화 공동대응 차원에서도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의제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치적·비군사적인 기후변화 이슈에서 남북을 넘어 남·북·미간 협력은 북미관계에 신뢰를 형성하는 첫 단계로서의 의미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남북 그린데탕트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DMZ에서 남북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 DMZ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정전위원회(유엔사)가 DMZ 관할권(Jurisdiction)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

기획 칼럼

의 접경협력을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남북 교류가 ‘관리권(administration)’ 개념을 이용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착안해 관할권을 완전하게 이양받기 전까지 DMZ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 관리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정책 조율과 협의가 중요하며, 한미동맹의 강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자신들의 상황이나 관리 역량의 한계를 일정 수준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이 주민들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기상·수문사업의 과학화와 현대화 등 내부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관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린분야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제재 면제 혹은 예외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민생 분야에서 대북제재가 유연하게 적용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면,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양측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협력 아이템을 발굴해, 그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산불, 가뭄 등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주요 문제들이다. 산림 황폐화로 인한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반복, 심각해짐에 따라 북한 당국은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 치산치수전망계획(2021~2030) 등을 수립해 산림복구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남북 간 산림협력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접경지역을 넘어서는 산림병해충이나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듯 접경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이익을 구현한다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통일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MZ세대에게 남북 간 협력을 통해 얻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

기획 칼럼

에게 평화의 편익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칭 ‘남북 그린평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함으로써 그린데탕트와 관련된 정부 부처, 접경 지자체,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북한과의 효과적인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린평화위원회에서는 국토부, 환경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및 강원, 경기 등 접경 지자체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린’ 분야의 개발협력사업들을 취합해 지역적, 분야별 특화에 기반한 포괄적인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책 추진 방향 및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그린평화협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법』 등 여러 법률로 중층적,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접경지역의 규제를 단순화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그린데탕트와 블루데탕트로 남북관계의 정상화 실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정부가 그린데탕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 중이지만, 지금까지 간과되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해양이다. 그동안 남북 접경협력은 DMZ 등 주로 육상접경에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접경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 공간에서의 남북 간 협력은 주로 수산분야 등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 그린의 측면에서 해양의 가치를 활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서 해양이 갖는 그린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및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에서 해양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해양 생태계는 육지의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인 산림만큼이나 중요한 차세대 탄소흡수원이다. 연안 및 해양생태계에 저장된 탄소를 블루카본(Blue Carbon)이라고 하는데, 맹그로브, 염습지 및 해초지가 대표적인 블루카본이다. 2013년 블루카본이 탄

기획 칼럼

소흡수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블루카본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포함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갯벌에서 한 해 동안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약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최근 발표하였다.¹⁾ 그러나 한반도 연안지역의 ‘비식생 갯벌’은 아직 탄소흡수원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갯벌의 탄소흡수능력이 과학적으로 인정받도록 갯벌 보유국들과의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해양수산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네거티브를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 흡수가 필수적이다.²⁾ 세계 5대 갯벌을 보유한 한반도에서 기존 블루카본 서식지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탄소감축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동시에 신규 해양탄소흡수원으로 갯벌이 인정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그린데탕트의 완성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와 함께 접경해역에서의 블루평화지대화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접경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블루카본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해 공동연구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육상과 해양 접경에서의 남북 간 신뢰구축 및 상호이익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에 기반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갯벌,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 『보도자료』, 2021.7.6.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2021.12.

기획 칼럼

그린데탕트 시대의 남북 산림협력

허 선 혜

(전북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소 연구교수)

1. 윤석열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5월 3일, 5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제시하였다.

이 중 5번째 국정 목표에 따라 18개의 국정과제가 제시되었고 그중의 하나로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가 제안되었다. 그 주요 목표로는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과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주요 실천 내용의 하나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 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도모’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린데탕트’에서 ‘그린’ 정책의 개념은 ‘전통적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산업을 위한 정책’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데탕트’는 “국제관계 속에서 대립과 긴장이 완화되어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 또는 그것을 지향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두 개념을 통합한 ‘그린데탕트’는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그리고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을 뜻한다.³⁾ 따라서 남북 그린데탕트는 기능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정치적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환경 분야를 협상 의제로 삼아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사업을 도모한다. 이를 통하여 남북 간 대립과 긴장 완화와 상생,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을

기획 칼럼

위협을 약화함으로써 향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동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그린데탕트’는 2012년부터 논의되어왔다. 2012년 10월 21일, 청와대 김상협 녹색성장 기획관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의 인천송도 유치배경 브리핑에서 “북한의 녹색성장 전략으로 남북협력을 강화할 경우 그린데탕트 시대 올 수 있어”라며 언급하였다. 이후 2013년 2월 4일 ‘녹색성장위원회 제22차 보고대회’에서 <녹색강국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중 “대북조림사업 등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린데탕트 조성”을 당선인 측에 제안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환경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에 토대를 둔 그린데탕트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에서의 남북 그린데탕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먼저 남북산림협력의 역사와 성과 및 한계를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

2. 남북 산림협력의 회고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최초의 합의는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에는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통해 환경 부문을 남북교류협력에 포함시켰다. 1992년 9월 17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1항에서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라고 명시하여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산림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협력은 1999년대 후반, 산림청의 계획에 따라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을 거쳐 묘목 817천 본, 종자, 농약을 북한에 지원하고 수목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금강산에 파견하면서 시작되

기획 칼럼

었다. 이후 2005년에는 개성공업지구 주변에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당해 8월 18일에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이 체결되었다. 이 합의문의 제 5항은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나가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 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양묘장 조성의 대상지역을 물색하고 상호합의를 이루는 실행계획을 세웠으나 실질적 사업진행이나 후속조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2007년 10월 4일 발표된 “제 2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제5항에는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의 제5항에서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2007년 12월 6일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합의서”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2008년부터 남북이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12월 21일에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환경보호 및 산림협력사업 내용이 체결되었다. 이 합의에서는 제4항에서 협력대상지역과 시기를 명시하였다. ‘남과 북은 양묘 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 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한다. 그리고 제5항에는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명시하였다.

남북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정치 환경의 변화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이후에 다시 한번 남북 산림협력에 탄력을 받게 된다. 2018년 7월 4일에 “제1차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

기획 칼럼

담”이 개최되어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다시금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8월 8일에는 “금강산지역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에서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합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018년 10월 22일에는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이 성사되어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논의하였다. 당시 주요 의제로 산림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기타 의제가 거론되었다. 나아가 2018년 11월 29일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 전달 및 개성 인근 공동방제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산림청 당국자와 전문가가 양묘장 현대화 사업지원을 위한 북한 양묘시설 및 기자재 공장 등 남북산림협력 평양 현장을 방문하였다.

지난 시간 동안 남북 간 논의 및 추진되어온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산불 방지, 묘목 지원, 조림사업 등의⁴⁾ 실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 및 장기화 되고, 지난 문재인 정부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 측의 대화,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의지에 북한이 긍정적인 화답을 하지 않음에 따라 대북 산림협력 사업은 현재 중단 상태에 머물러 있다.

3. 그린데탕트 시대 남북 산림협력 분야 모색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는 못하였으나 지난 시기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 대북 산림복구 지원으로 인하여 남북 간 산림복구 지원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산림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산림복구조성계획을 세워 수림화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2015년 9월 유엔의 ‘포스트 2015 개발의제(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동참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산림복구사업에 대하여 강한 의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그린데탕트’ 시대에

기획 칼럼

는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의 선순환을 시작하는데 남북산림협력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정세변화에 맞춰 새로운 지원방안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산림복구 지원 사업이 남긴 기반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북 협력을 다시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과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국제사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도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등 대북 협력 제한점이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직접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높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산림협력에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목해 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의제로는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식량안보, 재해재난 등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은 남북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는 북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1994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2005년 4월 교토의정서, 2016년 8월 파리기후 변화협정에 가입했고,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COP25에는 국토환경보호성 국장급이 대표로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도 한 바 있다. 대내적으로는 ‘2019년-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자체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 전망(BAU) 대비 16.4%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를 위해 ‘산림건설 총 계획(2013-2042)’을 수립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성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은 남북 간 공통의 이익이 있으므로 IUFRO, FAO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북 산림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제화,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에만 국한되지 않고 빈곤과 재해재난 경감 차원의 의제로의 확장성을 도모한다면 대북 제재국면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기획 칼럼

둘째, 지방자치단체,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을 구상할 때는 북한의 대내적 국가전략과 정책적 기조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다양화된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협력분야를 보면 양묘장 건설 및 현대화 지원사업, 조림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남북 양묘장 협력사업은 북한이 자립적으로 나무심기에 필요한 묘목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고, 공동 나무심기 사업의 경우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와 남북화해협력 사업으로서 민족 동질성 회복, 우정과 평화의 상징으로 산림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북측의 수요를 고려하여 과거 진행해온 사업을 바탕으로 연속성을 이어간다거나 선진 산림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수요 및 수용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 과학기술중시 정책에 따라 갖추어놓은 지식보급·연구체계를 활용한 능력배양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국가차원에서 평양 과학기술전당과 연결하여 원격교육, 자료검색 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학술교류 시 북한 내 원격망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 단위별로 배치된 과학기술보급실을 활용한 소규모 단위, 실별 교류 지식교환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선진과학기술과 모범단위의 우수사례 등이 보급실을 통해 주변지역에 공유되고 있으므로 각 시도별 보급실 체계를 활용하면 지식기술의 보급에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농촌개발,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이 이루어지는 특성에 맞춰 우리의 지역과 북한의 지역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접근을 통해 특화사업 개발, 적정기술 발굴 및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북한이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국가리뷰(VNR) 보고서에서 산림의제의 확장성과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림황폐 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농업, 축산업, 어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형 산림협력 모델을 개발한다면 식량문제 해결, 주민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부가가치가 있고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 식량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버섯, 산열매, 식물자원, 곤충자원 등 미활용되어온 산림자원 교류협력 사업분야를 지자체별로 새롭게 개발하여

기획 칼럼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SDGs 17개의 목표 중 2번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당성과 수용력이 높은 협력의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북한 산림환경의 개선은 한반도 그린데탕트 도래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 3) 추장민·정성운·정소라·박선규. 2013. 「한반도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12쪽.
- 4) 양묘장 부지, 온실 신축, 관리동 공사 등 양묘장 건설은 2003년과 2005년에 금강산(평화의 숲 지원), 2007년에 개성(경기도, 우리민족서로돕기 지원), 평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지원), 개풍(경기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령(겨레의 숲 지원), 2008년에 황해북도(겨레의 숲, 늘푸른 삼천 지원), 개성(우리민족서로돕기, 경기도 지원), 함경북도(겨레의 숲 지원), 2009년에 평양(늘푸른 삼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지원), 함경북도(겨레의 숲 지원), 2015년에 중화, 강동(한국 카리티스 지원), 사리원(아시아녹화기구 지원)에서 진행되었다. 산림병해충방제 지원은 2001년~2007년 강원도(강원도 지원), 2007년에 용악산, 대성산 력포구역(겨레의 숲, MBC 지원), 2008년에 용악산 력포구역(겨레의 숲, MBC 지원), 2015년 금강산(대한민국 정부 지원), 2018년에 금강산, 북한(대한민국 정부 지원)에 진행되었다. 조림사업은 2005년 개성(산림청 지원), 2007년 금강산(평화의 숲 지원), 사리원 지역(겨레의 숲 지원), 개성(우리민족서로돕기,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지원), 개풍(경기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원), 2008년에 금강산(평화의 숲 지원), 개성지역(우리민족서로돕기 지원), 2009년 개성지역(우리민족서로돕기 지원), 평양 지역(겨레의 숲 지원), 2010년 황해북도(겨레의 숲 지원), 2014년~2017년 평안남도(한스자이델재단 지원) 등이 진행됐다.

기획 칼럼

감염병과 재난대응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홍 성 결

(해양정책학회 연구위원)

기획 칼럼

지식중계

북 리뷰

북한 알기

북 소식

북한 수산물

1. 서론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COVID-19 감염병 혼란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질병과 다르게 COVID-19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27~32kb 크기로서 구형 외부의 spike단백질이 크라운 형태를 띠며, 종종 폐렴을 비롯하여 각종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SARS-CoV 유형으로 알려졌다.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감염병 대유행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1억 명 이상이 사망해 유럽 인구의 1/3을 감소시켰으며, 20세기 초 스페인독감도 5천만 명 이상 사망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 새로운 유행병의 발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중동발 메르스 증후군에 이어 연속적으로 세계적 위기상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세계가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무역의 진전과 세계화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전염병의 전파속도가 과거와 다르게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어서 “위험의 크기가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질병의 유행은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 인류전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형재난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동시에 긴밀한 국제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인접한 국가 간의 협력이 공존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 간의 보건의료협력이 실천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바이러스 재난은 인종과 국경이 없이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협력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초국경 협력”이라는 당면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획 칼럼

새로운 세계적 위협 앞에서 인류의 역량이 시험대상이 되고 있다.

인류가 선택해야 할 일은 포용적 자세로 공동노력을 통해 질병의 근원을 찾고 원인을 퇴치하는 일이다. 지역적 위기는 인접한 국가 위기로 파급되며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는 국제 공동협력이 열쇠이며 다른 방법이 없다.

2. 북한의 상황

북한 당국은 중국 우한에서 COVID-19가 발생한 초반기인 2020년 1월 22일부터 중국과 북한 간 국경을 폐쇄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던 자국민의 입국도 금지했다.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에 어긋나지만 북한은 이를 강행하고 있다.

북한은 효과적인 방역을 했다고 선전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보건체계를 볼 때, 실제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유무를 검진조차 명확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다.

평양을 제외하면 제대로 의료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병 확산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의료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시설과 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경폐쇄는 불가피한 조치로 예상된다. 북한은 2003년 사스와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유행 때에도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대북관련 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빠르게 시신을 수습하고 관련되는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COVID-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계획위원회가 총괄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방역을 진두지휘하며” 전국적 비상체제로 전환시켜 지휘부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은 COVID-19의 확산으로 상황을 파국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의 국경봉쇄는 대외 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무역을 중단하는 비상시국의 초강수를 둔 것이다.

기획 칼럼

3. 재난대응 남북협력의 사례와 시사점

감염병 확산 방지 또는 유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남북협력이 필요함을 남북이 인지하고 이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졌던 선례가 있다.

2007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7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합의하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7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 있다.

제3조(경제협력) 제4항(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은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충해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제6조는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7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7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의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 및 이용, 산림녹화 및 병충해방제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 보존과 환경오염 저감 등 환경보호분야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협의 추진하기 위해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제1차회의를 2008년 4월초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기획 칼럼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보건의로 협력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타미플루”를 계기로 지원 사업에 착수했으나 유엔의 대북제재에 의해 협의자체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2019년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을 맞아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협력을 타진했지만, 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신뢰를 오랫동안 쌓았던 유진벨재단은 2017년 북한 내 12개 결핵센터를 방문하여 의약품을 제공하였고, 2019년에도 수차 방북을 통해 결핵약품과 장비를 제공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속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경제제재의 면제를 받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경제제재 면제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다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이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는 생명과 안전에 머무는 사안이 아니라 “지구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4. 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인류에 대한 재난은 감염병의 확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감염병 확산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도 중대 상황으로 자연재난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남과 북은 재난발생으로 상대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서 타방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4년에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노동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공식적 의제로 논의했음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남과 북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재난대응 남북협력”을 위한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 칼럼

첫째,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대북제재 상황에서, 제재면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안별이 아닌 포괄적 면제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지원은 사안별로 제재위원회가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난에 대한 협력은 포괄적인 방식이 되어야 한다.

경제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도,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언론발표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을 지원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소리」는 “이란,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도 정권 지도자들이 자주 거절한다. 이는 정권의 지도자가 국민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둘째, 재난의 남북공동대응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재난, 산림병충해 등의 협력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연구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공동대응의 제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사례에서 “1973년 재난공동대응 협정” 체결을 교훈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발생, 공유하천의 홍수피해, 지진 등 폭발로 인한 재난 등에 대해 재난의 피해가 상대측 영역으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약을 동서독이 체결했던 사례가 있다.

셋째, 민간부문과 국제적인 단체 등을 통한 협력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정권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남북협력은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지속적 협력을 위해서는 북측에 신뢰를 쌓아왔던 “유진벨재단”과 같은 민간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독일정부 지원을 받는 “한스자이델(HSS)재단”과 같이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과 함께 사업을 모색하는 공조 모델도 강구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상중계

KMI-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공동 국제학술회의
: 변화하는 동북아정세와 남북한 해양협력의 모색

2022년 5월 19일 KMI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었다.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한 해양협력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하에 세션 1에서는 ‘미·중·일의 해양 전략과 동북아정세’를 주제로 다루었고, 세션 2에서는 ‘남북관계 전망 및 지속가능한 해양협력 모색’ 주제를 다루었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신정부가 출범한 한반도 정세도 요동쳐 이에 따른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달라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전망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지는 남북관계를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해양수산분야의 새로운 아젠다를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1> KMI 김종덕 원장 개회사(좌) 고려대 아연 이진한 원장 개회사(우)



KMI 김종덕 원장의 개회사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이진한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세션에는 롤랜드 월슨 교수, 리 지아청 교수, 마쓰히로 미무라 주임연구원의 발표와 장 무후이 교수, 박용한 선임연구원, 김숙현 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2세션에서는 이정철 교수, 윤인주 연구위원, 진희권 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남근우 연구위원,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 채수란 전문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전하고자 한다.

지상중계

Session 1: 미·중의 해양전략과 동북아정세

[발표 1] 미국의 동북아 해양전략

롤랜드 윌슨

(조지메이슨대 교수)

- 미국의 동북아 해양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이며, 동북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외교 정책 및 파트너십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동북아 해양전략의 구성과 그 의미를 순서대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특히 아시아의 전략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미국의 동북아 해양전략: 미국의 해양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 ①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투자, 바다와 하늘이 국제법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②인도-태평양은 호주,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및 태국과의 5개 지역 조약 동맹 강화, 주요 지역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 대화) 및 약속 이행이 강화되고 통합된 ASEAN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③인도-태평양은 무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번영해야 한다. ④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 강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일 동맹국과의 확장 억제 및 조정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오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의 군사 동맹) 이행 지속을 포함한다. ⑤인도-태평양은 자연재해와 인공재해 및 분쟁에 대해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국들이 위의 전략을 수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 해양안보는 다양한 의미가 있으며 군사적 목표 또는 보다 광범위한 국가 안보와 관련될 수 있다. 즉 경제적 목표를 포함하며 법률, 규정 및 모든 병역 서비스를 포함한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상중계

강력한 동북아 해양전략 안에 내재하여 있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동북아 해양전략을 위해서는 동북아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발표 2] 중국의 동북아 해양전략

리 지아청

(랴오닝대 교수)

- 중국의 해상안보 목표는 낮은 수준의 해상안보와 중간 수준의 해상안보, 높은 수준의 해상안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낮은 해상안보는 해안선·섬·영해·배타적 경제수역·항로보안 등을 의미한다. 중간 수준의 해상안보는 석유·가스·수산자원 보호를 의미하고 높은 수준의 해상안보는 동아시아 바다를 둘러싼 미국과의 동등한 지배력을 뜻한다.
- 중국의 해상지배력: 중국은 해군력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고, 분쟁도서와 해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해상에서 군사 강국이 되길 원한다. 또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과 세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 도전과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중국의 안보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은 GDP의 2%를 군사력 강화에 쓰며 군사력 구축 및 중국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과 호주의 연합안보는 준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쿼드에는 영국, 프랑스, 한국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해양질서 대한 도전에 중국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해군력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3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전투그룹을 형성하였다.

지상중계

[발표 3] 일본의 동북아 해양전략

마쓰히로 미무라

(ERINA 조사연구부 주임연구원)

- 일본의 해양안보 목표: 일본의 해양안보는 크게 9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영해와 국제해양질서 강화에 있어 국익을 확보하고 해양의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한다. 둘째, 해양 산업의 이용을 촉진한다. 셋째, 해양환경의 유지와 보존을 목표로 한다. 넷째, 해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제협력과 공유체제를 갖는다. 다섯째, 해양조사 및 해양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여섯째, 낙도의 보전 등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발을 추진한다. 일곱째, 북극정책을 추진한다. 여덟째, 국제적인 제휴를 형성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아홉 번째, 해양 인재의 육성과 해양에 관해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 일본 해양정책의 특징: 일본은 섬나라로 해양의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고 있으며 해양안보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위대를 파견해 해양의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하고자 하며 국제법적인 접근을 중시하여 G7,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ASEAN 지역포럼 확대 등 국제적인 틀을 활용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극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조약에 근거해 국제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 동북아와 관련 문제: 한국과 독도(다케시마), 그와 관련된 EEZ 와 어업수역에 관련한 문제가 존재한다. 북한과도 일본해를 둘러싼 동해 EEZ 문제가 있으며 어업수역에 관련한 문제가 있다. 중국과는 센카쿠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상존해있으며 동중국해의 석유 자원과 항해의 장유 문제가 있다. 러시아와는 북방4도와 관련한 영토문제와 그와 관련한 어업수역문제가 있으며 북극해 개발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 동북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위의 설명과 같이 동북아와 해양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나 어업수역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차후 중국과 해양질서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상중계

[토론 1] 동북아와 해양전략: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장 무후이**

(성균관대학교 교수)

- 롤랜드 월슨 교수의 발제문은 해상전략의 정의를 비롯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공격성에 대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전 정부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심 전략 (Pivot to Asia),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 현 바이든 대통령의 업데이트된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정책의 연속성을 보았다.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남아시아와 아세안에서 미국이 더 많은 파트너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 분업이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일본은 중국 주도의 BRI(일대일로)를 상쇄하기 위해 품질 기반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아세안이 일본과의 실용적인 경제협력을 환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토론 2] 중국의 동북아 해양 전략**박 용 한**

(KIDA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미·중 간 해양세력 충돌 현상: 미·중 간 세력대결은 해양 충돌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군사적 격차를 양적·질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미국은 초격차 전략으로 쿼드, 오키우스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군사력을 보완하고자 한다. 일본도 경항모 개조에 착수해 원거리 개입의지를

지상중계

공표하며 미국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해양력 투자를 거부하기 위해 ASBM, SLBM 발사에 나섰다.

- 동북아 해역에서 이와 같은 해상변경 및 세력충동은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 ‘중앙권위체’가 부재한 동아시아 구조 특성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해상교통로(SLOC)의 안보위협은 동북아 국가에 치명적이다. 한국 물류 수송의 90%가 SLOC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질서는 해양안보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제한된 해양통제가 필요하며 모두가 이를 따라야 한다. 특히 해양에서는 분쟁 초기와 분쟁 강도별로 최적화된 전력을 적기에 투입해야 효과적인 억지력을 달성할 수 있다.
- 냉전 시기와 다르게 세력대립과 역내경쟁이 혼재하는 동북아 안보 특성상 중소국가는 안보 협력체와 동맹에 전적으로 편승할 수 없다. 강대국 전략경쟁으로 인해 규범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주변국의 안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 3] 일본의 동북아 해양 정책: 일본의 해양 정책 과제와 이에 대한 제언

김 숙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을 비롯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일본은 해양관련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영토문제, 자원, 항해의 자유 확보 등 과거 전통안보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갈등이 복잡화되어 있다.
- 민주주의 가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한계: 해양정책은 일본뿐 아니라 각국의 국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한미일 협력이나 한일협력 등 이른바 가치와 시장경제 논리로 해결되기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토나 자원문제 등은 더욱 민감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상중계

궁극적인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 신안보 관점에서의 접근: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규모의 과제로 해양의 안전, 수산물의 안정성 문제는 공감과 공유가 가능한 사안이다. 한-일, 중-일, 일-러가 안고 있는 양자 간 과제를 우선하기보다는 다자간 협력의 틀 안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은 일부 특정국가의 영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제인 만큼 자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상중계

Session 2: 남북관계 전망 및 지속가능한 해양협력 모색

[발표 1]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전망

이 정 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은 최근 국방발전전람회(21.10.12)에서 “우리의 주적은 정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라고 밝혔으며 열병식 연설(22.04.25)에서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우리 핵무력은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도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바이든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과 비교해 양 행정부의 중간 포지션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선 실무회담 우선론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탐다운 우선론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부분적 해제의 내용이 담보되기 전에는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방침 아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전면개편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 남북관계 전망: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환경변화에 따라 북한의 변화된 수요를 감안하되,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

지상중계

단 등 전통적인 협력사업 외에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발전 수요를 반영하는 분야에서 공동연구, 지식공유부터 시작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한 발전 추세를 감안하는 친환경, 산림,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새로운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표 2] 대북제재와 코로나 속 북한 해양수산 대응과 전망

윤 인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2017~2022 북한을 둘러싼 환경변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을 둘러싸고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윤석열 정부의 출범 등 4가지 변화요인이 있었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국가의 무역규모가 급감하였고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적 변화가 수반되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국경을 전면 봉쇄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북·중·러 간의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 대내외 환경변화가 북한의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 통계치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최근 위와 같은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전체적인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지역별 대북 수출량을 살펴보면 길림성과 북한의 교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장시성과의 교류량은 줄고 있으며 광둥성과의 교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밖에 2020년을 전후로 총 해운 수송량에서 북한 국적 선박의 점유율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 남북한 간의 해양수산 이슈와 전망
 - ① 동해 수역에서 제3국의 남획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표류 또는 좌초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

지상중계

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북한 어선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③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의미 있는 해운 네트워크: 남북 간 직접적인 해운 교류는 없지만 해운 네트워크 상 여전히 남북 간 항구는 연결되어 있고, 변화하는 북·중 간 해운 네트워크를 예의주시하면 지켜봐야 한다.
- ④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은 코로나에 대한 북한의 공포심을 반영했던 사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선박을 통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 외에도 해상경계수역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적 조치에 협력이 필요하다.

[발표 3] 지속가능한 남북한 해양협력 의제 모색

진 희 권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원)

-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 14,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목표를 확인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속발전 전략계획과 한국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검토하였다. 이후 북한의 해양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을 통해 주요 이슈를 파악해 본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한 해양협력 의제를 모색해보았다.
- SDG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와 5대양을 포함하는 모든 자원을 보전함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SDG14는 기후변화(SDG 13)와 육상생태계(SDG 15)와 같은 의제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목표로 제시되어 해양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상중계

- IMO의 지속발전 전략계획은 ①실질적인 목적달성과 결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행개선, ②신기술과 진보기술의 규정체제로의 수용, ③기후변화에 대응, ④해양관리의 연계, ⑤국제무역의 세계적인 촉진과 보안강화, ⑥규제의 효율성 제고, ⑦기구의 효율성 제고 등 7가지이다. 이러한 전략계획이 시사하는 바는 과학기술 발전을 반영한 종합적 해사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뜻한다. 그리고 IMO의 전략계획을 토대로 주요 항목의 목표 달성 및 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해양자원 개발을 목표로 해사산업 핵심기술을 망라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 해양수산부의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쾌적한 해양환경 속에서 친환경적인 해양 경제활동을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
- 북한의 해양환경: VNR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기구의 규범에 따라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양 및 해안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보호와 해양 산성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SDG 14지표가 부분적으로 측정이 되며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관련한 지표의 측정은 표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토론 1]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전망

남 근 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과 연동된 남북관계 해법
북한은 그동안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조건부 비핵화 입장에서 ‘단계적 동시병행’ 비핵화 원칙

지상중계

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보유 동기가 강화되면서 김정은 총비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대미 메시지를 발신해 ‘조건부 대미 관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차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대북 인식론의 3가지 키워드 : 합리적 비합리성, 국가의 회복탄력성, 정체성
 - ① 북한체제가 비록 광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역사적 경로와 내재한 이익을 사수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갖기 때문에 합리적 비합리성을 북한을 읽는 키워드로 제시한다.
 - ② 제재를 통한 압박이든, 경제성장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이든 결국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체제 결속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동의한다.
 - ③ 정체성에 기반한 생명공동체는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평화공동체 혹은 생명공동체 등 어떤 공동체든 핵심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정체성 회복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경제 중심적인 교류협력 패러다임에서 생태, 환경 분야로의 교류협력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토론 2] 대북제재와 코로나 속 북한 해양수산물 대응과 전망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서울 대표)

-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여파: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었다. 곡물 생산성 저하로 인해 최근 탈북자 면담을 시행한 결과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2019년 이후 석탄의 수출량은 통계상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북한

지상중계

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관한 발표수치(발열자 등)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분명한 것은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 주민들의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있다.

- 북한의 수산물: 수산물 수출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국내 소비로 전환되었을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소비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불법수출을 의심해볼 수 있다.
- 북한과의 해상전략(비군사적 부문 논의): 북한은 수산양식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명태 치어 생산량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수산부문 특히 치어의 수산양식 지원을 북한과의 협력분야로 준비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토론 3]지속가능한 남북한 해양협력 의제 모색

채 수 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고 국내화(localize, 현지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작년에 VNR 보고서를 내놓는 등 국제규범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이 연구는 북한이 작년에 발간한 VNR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남북해양협력 의제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은 SDG 13, 14, 15, 17, 5가 75점 이하로 낮은 편이다. 그 중 점수가 제일 낮은 것은 SDG 15(육상생태계)이고 SDG 14(해양생태계)도 낮다. 북한은 정보부족으로 점수와 순위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국제사회와 비교할 수 없다.
- SDG 14는 해양을 보존(conservate)하고 이용(use)하기 위해 세부목표와 이행지표를 제시한다. 자료에서처럼 10개의 지표 중 1티어가 2개에 불

지상중계

과해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북한은 SDG 14에 관련한 데이터가 더욱 부족하다. SDG 목표에 통계지표 생산의 중요성과 통계역량강화에 대한 투자 관련 항목을 포함할 정도로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는 중요하다. 통계지표를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 능력, 교육여건, 전문가 등이 필요한데 북한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여건의 부재로 통계지표를 갖추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더더욱 그렇다.

- IMO의 7개 전략 방향이나 해수부의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친환경,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내용이다. 북한도 이러한 국제기구의 규범을 준수하려는 차원에서 작년에 최초로 VNR을 보고하였다. 글로벌 규범을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에도 포함되었듯이 북한도 국제지원을 원하고 있고 또 북한이 SDG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국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난을 회복하기 어렵다. 물론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남북협력의제를 표면에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바다라는 자원을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수산, 해운, 항만 분야의 남북협력에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北 리뷰

[서평] 편견과 현실 그 사이 어느 곳인가 위치한 평양
(린지밀러·송은혜 옮김, 『비슷한 곳조차 없는』, 2021)

김 태 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신진연구자 소개

2022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 변화 연구 (1937~1960)』를 취득한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다. 근대 도시화 이후 현재까지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 대도시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2018년의 남북관계는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소통’하기를 원하였고, 북미정상회담을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의 공연이 있었고, 북한의 삼지연관현악단 또한 남한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남북문화교류의 장이 열렸으며, 열병식과 창건기념일 행사와 같은 군사 관련 소식이 아닌 일상의 평양이 남한의 대중매체에 등장한 것 또한 2018년이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2018년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 책의 저자 린지밀러(Lindsey Miller)는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던 시기 평양의 중심에서 이를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그녀는 2017년부터 주북한 영국대사관으로 발령받은 남편과 함께 평양에서 2년간 생활하고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과 자신의 경험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였고, 2021년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실제로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접하는 대부분의 독자는 그동안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과는 다른 북한의 일상

北 리뷰

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책을 다 읽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감상은 낯선 북한이 더 낯설어지는 대목과 낯선 북한이 친숙해지는 대목들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편견을 사실로 확인하는 부분도 존재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정·재·연예계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한 영상들과 후기들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까지는 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이 궁금했다. 하지만, 이 궁금증과 의문의 결론은 2년 동안 북한에 거주한 저자조차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저자는 2년간 평양의 문수동 외교단지에 거주하였다. 현재 문수동 외교단지는 대동강 구역에 속해있으며 동평양 지역에서도 시내와는 약간 떨어진 주택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시기부터 이 지역은 주택지로 개발되어왔다. 보여주고 싶은 공간만 외부에 공개하는 북한의 특성상 외교관들의 관저는 주로 고층건물과 살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하였지만, 도심의 외곽지역이다 보니, 빈민촌 또한 공존하는 것이 문수동 지역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양, 문수동과 평양 외곽지역을 여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평양을 소재로 한 여러 책과 매체들이 북한을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이 책은 평양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이다.

이처럼 이 책은 대중서로서 가진 의미도 충분하지만,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로서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책의 구성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저자는 책의 초반부에서 2017~2019년 북한에서 바라본 국내·국제정세를 설명하였다. 외국인 신분이었던 저자의 시각과 이를 함께 경험한 북한 주민들의 시선에 대한 설명도 서술하여 북한 내외부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중심으로 서술을 이어나간다. 사진을 찍은 년도와 월, 그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지면을 통해서나마 평양을 산책하고 있는 느낌을 들게 해주었다.

이러한 책의 구성은 북한을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생활사연구에 좋은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저자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서 겪은 경험을 일례로 들면 다른 국가에는 없는 교통법규를 확인

北 리뷰

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벽화나 동상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시험관들이 언급해주는데, 이것은 외국인들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칙이라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규율들의 경우 저자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자가 가진 정체성 또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린지밀러의 정체성은 외교관인 남편과 함께 평양에 주재하게 된 여성이었으며, 외국인 그것도 백인이며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었다. 이는 지금껏 고정적인 시각으로 평양과 북한을 바라봤던 남한 사람들의 시각에 굴절을 줄 수 있으며 편견을 깰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남녀의 성적 역할이 분담되어있다는 점을 저자의 시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로만 접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소식과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한 소식 등이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자의 기억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책 소개를 직접 인용하면서 서평을 마무리하겠다. 린지밀러는 책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이 책이 북한에 대한 독자들의 의문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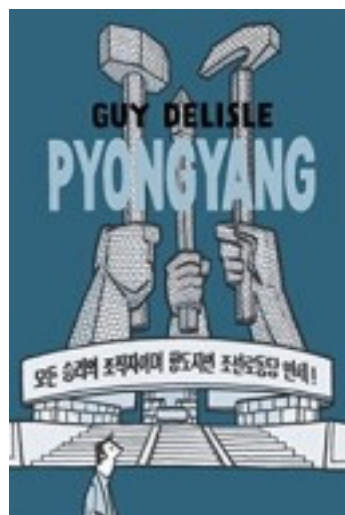
물론 북한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현안들 북핵 문제나 외교 문제, COVID-19 문제 등이 이 책을 통해 해소되거나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이념적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한반도를 기억하며 일독을 적극 추천한다.

北 리뷰

[서평] PYONGYANG: A JOURNEY IN NORTH KOREA
(Guy Delisle 저, 2018)리 은 경
(연세대학교)

신진연구자 소개

2022년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수도권 입지규제의 정치적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를 취득했으며,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Policy.” 등의 논문이 있다.



『PYONGYANG』은 캐나다 퀘벡 출신인 기 들릴(Guy Delisle)이 2001년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 두 달간 평양에 머물면서 그가 본 평양의 모습과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을 만화로 그려낸 일종의 여행기이다. 작가 기 들릴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아내 덕분에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세계 여러 나라에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경험한 자신의 경험담을 르포르타주 형식의 만화에 담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PYONGYANG』 외에 그의 대표작은 『굿모닝 버마』(2010), 『굿모닝 예루살렘』(2012) 등이 있다.

『PYONGYANG』은 작가 기 들릴이 애니메이션 작업실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일상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곳의 안내원과 통역사와 함께 북한당국이 허락한 방문지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유학생들, 고화질 송신기를 설치하기 위해 체류 중인 프랑스 엔지니어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파견된 미국 유해발굴단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특히 매주 주말마다 외국인전용 사교클럽에

北 리뷰

모여 자유를 누리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새롭다. 평양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평양은 그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정치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북한과 이해관계가 없는 타자의 시선으로 평양을 담아낸다. 우리는 평양을 남북한 관계에서 바라보지만, 외국인들은 제3의 입장에서 평양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PYONGYANG』을 통해 평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상황 등을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나 북한 상위계층이 갖는 특성을 『PYONGYANG』에서 살필 수가 있다. 작가도 언급하고 있듯이 평양은 북한의 특권층이 사는 도시다. 작가의 안내원과 통역사 역시도 평양에 사는 몇 안 되는 특권층이다. 그들은 해외에 갈 수 있고, 차를 타고 다니며, 쌀 배급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작가는 매년 퇴근할 때마다 숙소까지 걸어서 가겠다고 한다. 그의 안내원과 통역사는 이런 작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차를 타는 것이야말로 상위계층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 특권을 그들과 함께 누리기보다 자유로운 시간을 택한다. 그는 자유롭게 걷고 싶어 한다. 작가는 온종일 애니메이션 작업실에서 기술자, 안내원, 통역사 등 일종의 감시자들과 함께 억압된(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일한다. 그리고 작가는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숨 막혀 한다. 자유로운 외출도 허락되지 않았고, 당국에서 허락한 방문지나 면담자가 아니면 찾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안내원이자 일종의 감시자는 늘 불만의 대상이었다.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온 작가로서 자유로운 시간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작가는 어느 날부터가 호텔 방에서 종이비행기를 접어 밖으로 날리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유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작가의 시선에서 본 평양의 모습, 특히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평양의 특성, 그리고 그 문화적 차이와 가치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평양 시민의 특권 중 또 다른 하나는 특권층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교육이다. 작가는 어느 날 안내원과 함께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한다. 이곳은 북한 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이며, 북한 특권층의 자녀들만 가르치는 엘리트 학교이다. 작가는 이곳에서 로봇과 같은 어린 아이들의 연주회를 접하게 된다. 이 연주회를 자랑스럽게 바라본 북한 사람들과는

北 리뷰

달리 작가의 눈에는 이 모든 게 너무 비인간적이고 서글펐다고 묘사한다. 작가의 눈에 이 어린아이들의 연주회는 아이들의 자유 억압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다. 북한은 강제적인 조직생활에 아동들을 매어놓고 세뇌선전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는 비밀이 아니다. ‘평양학생소년궁전’도 예외는 아니다. 오직 권력 안정화를 위해 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세뇌해 북한 정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인 것이다. 이 또한, 평양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 그리고 그 문화적 차이와 가치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작가의 눈에 비친 평양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하나의 버블과 같았다. 그 버블 안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국가권력 통제 아래 어떤 자유도 없이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작가는 자신이 묵고 있는 양강도 국제호텔 수족관에 갇혀있는 바다거북을 통해 자유가 억압된 북한의 인민을 상징하기도 하며 태엽인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억압된 자유 속에서 그들이 특권이라 여긴 특권은 작가에게는 특권이 아니었다. 자유 없는 특권은 특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

흔히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북한을 접하곤 한다. 대부분의 미디어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정치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평양의 일상을 담고 있으며, 그 일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평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아무런 편견 없이, 철저히 외부인의 입장에서 경직되고 폐쇄된 평양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지만 결코 가볍게 다루진 않는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북한에 관심 있는 독자들 혹은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하신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북한 알기

북한 화장품의 최근 변화

채 수 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북한에서 지도자의 동정은 북한의 국가정책과 직결된다. 많은 학자는 지도자의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신년사 내용과 현지도 패턴을 점검하고 분석한다. 김정일의 뒤를 이은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5년 차에 경공업 분야 중 하나인 화장품 산업 육성정책을 펼치도록 교시하였다. 2016년 6월 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용악산비누공장을 방문해 주민 수요가 높은 머리물비누, 목욕용물비누, 가루비누 등의 생산이 인민 생활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⁵⁾ 또 2016년 3월 평양에 있는 미래상점에 방문해 “매장마다 우리가 만든 화장품·일용품·전자제품·식품을 비롯한 갖가지 질 좋은 상품들이 꽉 차 있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라고 하며 여성들의 관심사인 화장품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⁶⁾ 그밖에 2017년 신년사에서 경공업, 농업, 수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공업 원료·자재 국산화, 인민소비품 다종화 및 다양화, 질 제고를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육성정책을 통해 북한의 화장품은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봄향기’, ‘은하수’, ‘미래’, ‘금강산’이라는 브랜드로 생산되었다. 이들 화장품은 보습 중심의 기초화장품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2016년 연구 당시⁷⁾ 입술연지(립스틱), 광택입술연지(립글로스)와 같은 색조화장품을 비롯해 미안막(마스크팩), 향수, 해빛방지크림(선크림), 클렌징 폼도 생산되기는 하나 대체로 5종 세트(살결물, 물크림, 닛크림, 밤크림, 분크림), 6종 세트(살결물, 물크림, 분크림, 영양크림, 크림, 세수크림) 형식의 기초화장품을 세트로 구성해 고가(2016년 기준 북한 돈 15~30만 원 상당)로 판매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용어는 한국과 상이한데 살결물은 스킨, 물크림은 로션, 분크림은 리퀴드 파운데이션, 세수크림은 클렌징크림 등을 뜻한다.

북한 알기

<그림 1> 개성고려인삼 화장품



<그림 2> 개성고려인삼 화장품



북한 화장품의 특징 및 장점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성고려인삼 원료를 비롯해 살구씨 기름, 수세미오이즙, 녹두추출물 등을 활용한 천연추출물 성분의 보습을 꼽을 수 있다. 화장품에 전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모든 성분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보습력은 인정받은 바 있다.⁸⁾ 그러나 향수 및 색조화장품은 이제 생산을 시작한 단계로 인공적인 향취, 립스틱 발색 미비, 금형 및 제형기술 미비, 생산품의 다양화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화장품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최근 4년간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 화장품 기사를 분석하여 과거 화장품 생산과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기술역량 강화, 디자인 혁신을 통한 상품성 제고를 통해 화장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새 제품개발, 질제고>를 주제로 화장품 부문 과학기술 및 학술토론회를 진행하며 자체적인 기술과 자원만을 활용하도록 자립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가령 박하 향을 넣은 비듬제거샴푸, 붉나무벌레집으로부터의 천연머리카탈염색제, 효소법에 의한 밀단백분해물, 솔꽃가루를 이용한 화장품, 비누용촉백향료 제조방법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결국 최근 달라진 북한 화장품 변화의 특징은 첫째,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 수입을 줄이고자 연구자들의 기술혁신을 통해 재자원화와 국산화를 이루고자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희 경공업 재료를 가공해 재활용하는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뜻한다. 북한은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 기술적 문제해결에 방점을 두고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북한 알기

<그림 3> 화장품을 연구하는 모습



<그림 4> 화장품 공장 전경



출처: 2021년 10월 17일 자 노동신문(좌), 2021년 9월 27일 자 노동신문(우)

둘째, 화장품 관련 제품이 보다 다종·다양해졌다. 먼저 <그림 5>와 같이 기존에 생산되지 않았던 분장도구가 출시되었다. 색조 화장 시 사용하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브러시(솔)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색조화장품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실제 2019년 11월 노동신문에 따르면 분장도구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며 눈등분(아이섀도), 마스크라, 염색크림까지 제품을 출시해 더 이상 수입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한다.⁹⁾ <그림 5>의 오른쪽 사진처럼 기초화장품이 다양해진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노화방지를 위한 콜라겐 화장품세트, 미백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 등이 출시되었다.¹⁰⁾ 또한 뒤에 후술할 향수, 방향제 등이 다양하게 생산되기 시작하여 화장품 관련 제품의 다종·다양화가 실현되고 있었다.

<그림 5> 다양한 화장도구(좌)와 기초화장품(우)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dprktoday/29250010617/in/photostream/>

셋째, 최근 북한에 다양한 향료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2020년 10월 8일 평양 락랑구역에 평양향료공장이 준공되면서 향료사업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 방안향수, 위생실향수 등의 방향제가 출품되고 있으며 오미자향, 생당쑥향, 박하향, 인삼향, 쑥향, 청송향, 솔잎향료 등을 활용한 갖가지 향료들이 출시되었다. 주로 식물의 꽃, 잎, 열매, 씨 등의 식물성 천연원료를 활용한 60여 종의 딸기향, 우유향, 사과향, 박하향 등이 식용 및 공업용 향료로 개발되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¹¹⁾ 향료산업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식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 그 지역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는

북한 알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¹²⁾ 북한 고유의 천연향 발전은 세계적으로 천연 향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6> 새로 출시된 북한 향수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dprktoday/29250010617/in/photostream/>

이처럼 과거와 다른 세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나 과거의 화장품 특징과 유사한 점도 있다. 여전히 개성고려인삼을 활용한 보습 중심의 기초화장품 세트 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과 출시된 화장품을 인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고가인 제품가격에 더해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자체 원료를 활용해 자국의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화장품 전시회에서 해빛방지분크림(자외선 차단 파운데이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는 보도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6년 전 이미 자외선 방지크림이 출시는 되었는데 이를 파운데이션에 접목하여 더욱 발전된 제품이 출시된 것이다. 한국의 한방 화장품이 고급화전략을 통해 전 세계에 수출되었듯, 북한의 천연향에 세계가 주목하며 북한의 화장품, 향수 등이 전 세계에 수출될 날을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꾼다.

- 5) 노동신문, “김정은위원장 룡악산비누공장건설장 현지지도” 2016년 6월 4일 자.
- 6) 노동신문, “멋쟁이건축물-미래상점”, 2016년 3월 29일 자.
- 7) 남성욱·채수란·이가영,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한울아카데미, 2017.
- 8) 위의 책, 220~350쪽.
- 9) 노동신문, “우리것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전시회(1)”, 2019년 11월 14일 자.
- 10) 노동신문, “인민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가” 2019년 11월 21일 자.
- 11) 조선신보, 평양향료공장 준공...자체힘으로 향료 생산, 2020년 11월 14일 자.
- 12) 오재순, 『세계 식품 향료시장의 환경과 법적규제』, 식품과학과 산업 12월호, 2017.



북한 해양·수산 기사 (2022년 4월~6월)

진 희 권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원)

<2022년 4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 신문	4월 3일	천연기념물 -오차바위	-‘오차바위’는 황해남도 룡연군 읍에서 20여 km 떨어진 몽금포 연안에 위치
			-‘오차바위’는 직현군층의 규암이 해식과 풍화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귀한 바위로 학술적 의의가 큼
내나라	4월 3일	마양송어	-‘오차바위’의 높이는 12~15m, 밑둘레는 10m
			-‘마양송어’는 함경북도 무산군 ‘마양저수지’ 일대에 서식하는 조선의 특산종
			-두만강으로 올라온 송어가 쓴 알에서 자란 새끼고기들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마양저수지’의 생태환경에 적응된 민물송어
			-몸길이는 40~50cm, 생김새는 송어와 비슷하나 크기가 좀 작고 몸 색이 더 검으며, 등은 검은 보랏빛의 푸른색이고 배는 흰색, 송어보다 등쪽에 검은 밤색의 반점들이 더 많음
			-알낳이시기에는 수컷의 아래웃턱이 길어지고 구부러지며, 이빨은 날카롭지만 송어보다는 약함
			-7월 하순경 ‘마양저수지’로부터 약 20km의 최상류까지 오른 다음 8월 하순~9월 말에 알낳이를 하며, 알은 7~10°C의 수온에서 50~70일이면 부하
			-새끼는 노란자위주머니의 영양물질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저수지로 내려옴
			-새끼고기는 주로 떠살이동물과 물밑에 사는 바닥 살이생물을 먹으며, 엄지고기들은 버들치, 모치, 자그사니들과 작은 물벌레들을 먹음

北 소식

			-‘마양송어’는 기름지고 맛이 좋은 고급어족의 하나로 학술적 의의와 경제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노동 신문	4월 4일	전세대 처녀 어로공들의 투쟁기품을 본받아	-남포수산사업소 소속 어선 ‘조선로동당의 딸 청년녀성영웅’호가 지난해 전국 ‘녀성’호 간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1등 -올해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남포시에서 진행된 ‘예술소조경연’에서 특등을 기록
노동 신문	4월 6일	2021년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위들에 공공순회우승기 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2021년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다음의 공장, 기업소, 농장에 ‘공동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 (해양수산분야 수상 단위)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선박분사업소, 광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 청강기계화분사업소,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 장송간석지건설분사업소, 다사기계화분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청진수산사업소, 남포수산사업소, 서해갑문사업소,령남배수리공장, 평양해운사업소,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조선 중앙 통신	4월 6일	수산부문에서 다시마 수확 한창	-황해남도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3월 다시마 생산계획을 완수하고 ‘씩음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황해남도의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 중
내나라	4월 8일	라선 철새보호구에 대한 현지조사 진행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철새들의 봄철이행시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람사르대상지)의 하나인 ‘라선철새보호구’ 일대에 대한 현지조사 진행 -지난 3월 조사에서 약 50종, 38,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기록되었으며, 그 중 전 지구적 위협종인 흰두루미(EN), 재두루미(VU), 흰죽지오리(VU), 바다꿩(VU), 귀농병아리(VU), 검은머리갈매기

北 소식

			(VU)와 흰죽지수리(VU), 뿔메새(VU)도 관찰 -전문가들은 다양한 습지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라선철새보호구’ 일대는 조류종 다양성도 매우 풍부하며, 특히 일대의 ‘바다자리호수’인 ‘서번포’와 만포가 물새들의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
노동 신문	4월 10일	천연기념물 -해금강술도	-‘해금강술도’는 고성군 읍에서 수십km 떨어진 곳에 위치 -‘해금강술도’는 화강암이 오랜 세월 비바람과 파도에 깎이고 씻기워 이루어진 크지 않은 바위섬 -‘해금강술도’는 해금강의 경치를 대표하는 섬으로 풍치적으로 뿐 아니라 비바람과 바닷물에 의한 ‘깎임작용’, 소나무의 성장상태를 연구하는데 의의를 가짐
노동 신문	4월 13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월도간석지 1구역 1차 물막이공사 결속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지난 해 2구역 1차 물막이 공사를 완공한데 이어 지난 4월 10일, 1구역 1차물막이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노동 신문	4월 21일	군중양어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원산시송배전소’와 ‘청진강재공장’의 양어 성과 소개 -‘원산시송배전소’에서는 양어에 필수적인 먹이 문제 해결을 위해 ‘뽕물등에’ 서식장을 꾸리고 ‘단백먹이’ 보장체계를 확립 -‘청진강재공장’에서는 새끼물고기를 자체로 생산하여 사름률과 증체률을 높이고 있음
노동 신문	4월 22일	해볼만한 일이다	-김책시는 해안에 위치해 바람이 많아 풍력발전에 유리, 시 일군들은 풍력 자원에 의한 전력생산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추진 -하지만 풍력발전기가 기술적으로 완비되지 못하고 발전능력이 낮아 성과는 미진 -김책시의 간부들은 원가가 적게 들고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발전능력이 높은 풍력발전기를 자체

北 소식

			의 힘과 기술로 제작, 종전보다 발전능력이 3배나 높은 발전기를 제작
조선의 오늘	4월 22일	동해의 명산 -칠보산	-김정일 위원장, 과거에서는 5대 명산을 꼽았지만 오늘날에는 6대 명산을 꼽으며 칠보산을 첫 자리에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언급 -칠보산 지명유래와 관련하여 칠보매장설, 지각변동설, 칠보단장설 등이 문헌에 기록 -칠보매장설은 7가지 보물(금, 은, 마노, 차거, 진주 등)이 묻혀 있다는 데서 유래 -지각변동설은 조선 동해의 북부기슭에 묘하게 생기고 보물이 많은 7개의 산이 불쑥 솟아올랐다가 6개의 산은 잠기고 지금의 칠보산만 남게되었는데, 그 7개의 산을 통털어 불리워진 이름이라 설명 -칠보단장설은 '칠보'라는 단어가 아름답고 희귀하고 진귀한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자연의 '일만경치'를 다 안고있는 이 산을 칠보단장을 한 첫날 새색시에 비겨 칠보산이라 칭한다는 설명 -봄에는 백화만발한 '꽃동산', 여름에는 녹음우거진 '녹음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피는 '홍화산', 겨울에는 흰눈으로 은빛 단장한 '설백산'으로 부르고 있음 -칠보산은 식물상도 매우 다양해 1,300여 종의 식물이 분포, 산삼과 삼지구엽초, 오미자 등이 있으며, 특히 송이버섯은 특이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으뜸으로 손꼽힘 -칠보산에는 곰, 노루, 너구리, 오소리를 비롯하여 80여 종의 산짐승류와 수리부엉이, 티티새, 찌르러기, 꿩새, 등 수많은 조류들이 있으며, '해칠보'의 보춘 앞바다에는 명태를 비롯해 게, 문어, 성게, 조개 등 수산자원이 풍부 -칠보산지구는 2014년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
내나라	4월 27일	동아시아 오세안주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지난 3월 봄철이행시기 조선 동해 연안에 위치한 10여 개 습

北 소식

		철새이동경로 (EAAF)에서 관건적인 지역 -조선동해 연안습지 조사평가	지의 물새종 다양성을 조사평가 -‘라선철새(습지)보호구’, ‘금야철새(습지)보호구’, ‘어랑천철새(습지)보호구’, ‘광포철새(습지)보호구’, ‘동정호철새(습지)보호구’를 비롯해 함경북도 청진시 ‘룡제만’ 일대,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강하구’ 일대, 강원도 통천군 시중호와 그 연안 일대에 대한 현지조사 진행 -조사 기간 100여 종, 약 10만 마리의 조류종들이 기록되었으며, 그중 60여 종 95,000여 마리의 물새가 ‘도중서식’한 것으로 평가 -이 기간 전 지구적 위협종인 흰두루미(EN), 알락꼬리마도요(EN), 흰이마쇠기러기(VU), 재두루미(VU), 흰죽지오리(VU), 바다평(VU), 귀농병아리(VU), 검은머리갈매기(VU), 흰죽지수리(VU) 등이 관찰 -뿐만 아니라 북청강하구 일대에서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i>Aythya nyroca</i> 한쌍이, 시중호 기슭에서는 최근에 관찰된 섬참새들이 또다시 기록되었으며, 라선철새(습지)보호구에서는 흰두루미, 흑고니, 일송오리가 어랑천철새(습지)보호구에서는 큰기러기와 쇠기러기가 금야철새(습지)보호구에서는 뿔농병아리가 기록 됨
--	--	--	---

<2022년 5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통일의 메아리	5월 3일	수산물생산을 늘일 목표를 내세우고	-수산성에서 2분기 수산물 생산 증대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작전을 면밀하게 추진 중 -‘고기배’들의 출어일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중심어장탐색’을 위한 실제적 조치들을 진행 중 -봄철물고기잡이 진입 이후 가장 실적이 높은 ‘문

北 소식

			덕수산사업소'와 '한천수산사업소', '운전수산사업소'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통한 집단적혁신 추동 -물고기와 바다나물을 제때에 하륙, 가공하여 냉동, 말림, 절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산물 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실무적 조치 진행
통일의 메아리	5월 4일	귀중한 재부	-‘삼천메기공장’은 1990년대에 건설, 북한의 메기 양어가 시작된 곳 -‘삼천메기공장’은 소문난 온천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한의 양어를 대표하는 공장으로 한 해 수 천 톤의 메기를 생산 -‘삼천메기공장’은 지능화, 정보화, 수자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실내 및 야외못의 상태가 실시간 측정, 조정되며 메기의 생육상태에 맞게 물과 먹이 공급량이 자동조절
민주 조선	5월 6일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사설 중)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자기 부문 앞에 제시된 중대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중요정책적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강조하며 수산부문 과제 제시) -수산부문의 근로자들은 물고기 생산을 늘이고 양어와 양식을 잘하는것과 함께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내나라	5월 6일	칠보산생물보호구의 동물종 다양성 조사평가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서 ‘칠보산생물권보호구’의 동물종 다양성을 조사, 평가 -조사기간 곰, 너구리, 메돼지, 노루, 산양을 비롯하여 10여 종의 포유동물 기록 -여름철(6~8월)에는 꿩, 검독오리, 왜가리, 바다가마우지, 번대수리, 검은조롱이 등 50여 종 800여 마리의 조류 관찰

北 소식

			-도롱뇽, 비단개구리, 두꺼비, 기름개구리, 긴꼬리 도마뱀, 구렁이, 늘메기, 살모사 등 양서류와 파충류도 기록
통일의 메아리	5월 8일	수산물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데 중심을 두고	-수산부문, ‘4월인민경제계획’ 완수 -수산성은 기상수문국과 연계해 수역별 해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해당 수산사업소에 통보, 고기배들이 어족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물고기 잡이에 나서도록 지도
노동신문	5월 10일	40만마리의 새끼명태 방류	-함경북도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에서 40만 마리의 새끼명태 방류 -사업소에서는 여러 종의 더 많은 새끼물고기를 방류하기 위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추진 중
청년전위	5월 10일	올해에도 만선기를 높이 휘날리리	-함경남도 ‘삼호수산사업소’의 ‘조선로동당의 딸 청년녀성영웅’호 처녀 어로공들, 지난해 연간 물고기잡이 계획을 130% 수행
내나라	5월 13일	위원 공업개발구	-위치: 자강도 위원군 -면적: 2.3km ³ -업종: 광물자원 및 목재, 농토산물가공, 기계설비 제작,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 연구
노동신문	5월 27일	바다양어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개척자들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에서 인공적으로 기른 명태에서의 알받이에 성공 지난해 수만 마리의 새끼명태를 방류한데 이어 올해에도 수십만 마리의 새끼명태를 방류 -사업소와 수산성 수산연구원 연구사들의 노력으로 ‘순환형명태양어체계’를 수립 -거듭되는 실패에도 수 십 차례의 시험을 반복해 과학적인 수정방법, 알깨우기 방법을 완성
내나라	5월 28일	만족을 모르는 개척자	-김일성 종합대학 자원과학부 실장 교수 박사 김룡홍은 해양지질학 분야의 실력있는 과학자 -북한 최초로 지하초염수 매장지를 발견해 소금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과학적 담보 마련

北 소식

<2022년 6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 신문	6월 4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해양수산 분야 수상 단위) -라선시 수채봉수산업소 하회농축산물생산분사 업소
외무성	6월 6일	일본은 인류의 생명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불법국가	-일본이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 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산생된 고농도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시키기로 결정한 지 1년을 맞아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명의 규 탄 기사
노동 신문	6월 13일	40여만 마리의 새끼태평양연어 방류	-함경북도 '직하대서양연어종어장'에서 올해 40여 만 마리의 새끼태평양연어를 방류 -‘직하대서양연어종어장’에서는 새끼물고기 생산 의 현대화, 과학화 실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를 튼튼히 다지는데 주력
조선의 오늘	6월 16일	소금생산량 1.6배 장성	-강원도 '원산제염소'에서 소금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배 증대
노동 신문	6월 18일	염분진해안공원 지구의 살림집건설 마감단계	-함경북도 '염분진해안공원지구'의 살림집 건설이 마감단계에 진입
노동 신문	6월 23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모범적인 단위, 기대들에 26호 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 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과 과학지식 수준을 높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생 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 에 적극 이바지한 모범적인 단위, 기대들에 26호 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 (해양수산분야 수상 단위) -갈마식료공장, 운하종어사업소



NK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2022.4월~6월)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4월 21일	One of North Korea's largest cargo ships unloads illicit coal in China: Imagery	-북한의 대형 벌크선 한 척이 중국 룡커우항으로 석탄을 운반하고 다른 화물을 선적한 것으로 확인, 일종의 물물교환 시스템으로 추정 -위성 사진 확인 결과, 길이 175~180m의 선박이 3월 초 남포의 석탄 저장소에서 석탄을 선적했으며, 3월 13일, 'Rina'호(28,700톤 벌크선)가 남포에서 룡커우로 향해 중인 사실을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를 통해 확인. 'Rina'호는 3월 29~4월 18일 룡커우 항에 정박했으며 석탄 하역 후 다른 화물을 실은 것으로 확인 -북한의 벌크선 중 175~180m의 길이 선박은 'Rina'호, '미래1'호, '룡림'호가 있음. 이 중 '미래1'호는 지난해 이후 AIS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룡림'호는 올해 1월 황해도를 지나 북쪽으로 향해 있던 흔적을 발견.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해당 선박은 'Rina'호로 추정 -최근 유엔 보고서는 북한 선박이 룡커우 등 중국 항만에 석탄을 불법으로 운송한 후 쌀, 비료 등 인도주의적 화물을 싣고 남포로 돌아온 사례가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기록되는 자금 이체를 피하기 위한 제재 회피 전술"로 해석
5월 5일	Chinese ship makes first known voyage to DPRK, flaunting maritime conventions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분석에 따르면, 중국 국적 화물선 'Shun Chang 78'(1600톤급)호가 4월 20일 중국 룡첸을 출발해 같은 달 30일 남포항의 입구인 서해갑문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 -'Shun Chang 78'호는 중국 해역 내에서만 운항했으며, IMO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으로 확인. 국제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해사기구(IMO) 대변인은 선박 소유자가 북한으로 향해 전 IMO에 등록했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300톤 이상의 화물선은 IMO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Shun Chang 78’의 중국 해역 내 운항은 적법하지만 북한을 운항할 경우 IMO 등록 필요 -‘Shun Chang 78’호의 남포 운항이 해상을 통한 운송에 대해 북한이 방역 규칙을 완화했다는 증거로 해석할 여지도 있음 -해당 선박이 어떤 화물을 운송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6월 8일	Singaporean man to be jailed for obstructing North Korea sanctions investigation	-북한 선박에 대한 불법 석유 운송에 관여하고 증거 등을 파괴해 유엔제재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은 ‘Yuk Tung Energy’ 사의 임원 Manfred Low Cheng Jin에게 15주 형을 선고 -2018년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예성강1호’로 기름을 옮기고 있던 ‘Yuk Tung Energy’ 소속의 유조선 ‘Yuk Tung’호 (36,000톤급, 도미니카 국적)를 적발, 이후 유엔은 ‘Yuk Tung’호를 제재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Yuk Tung Energy’사를 기소 -싱가포르 당국의 기록에 의하면 ‘Yuk Tung Energy’사는 2018년 유엔제재 이후에도 기업 활동을 지속했으며, ‘Yuk Tung’호는 선박 신호를 끄고 운항. 유엔 조사관들은 ‘Yuk Tung’호가 2020년까지 중국해역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
6월 15일	Obscure vessels conduct likely ship-to-ship transfer in North Korean	-위성 사진과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6월 11일, 북한 서해 해상에서 중국 출발 화물선과 북한 선박 간 불법 해상 환적 의심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waters	정황 포착 -석탄·광물 등 벌크 화물을 취급하는 ‘DATONGHAI001’호가 5월 31일 중국 광둥성 진장항 정박 후 6월 10일 북한 해역에 진입했으며, 6월 11일 남포항 약 70km 해역에서 북한 선박과 나란히 정박한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 당시 두 선박 모두 AIS를 끈 상태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James Byrne 정보국장은 위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제재 회피 기법의 최근 추세와 일치한다”는 견해 표명
6월 17일	Freight ship visits North Korean port weeks after picking up cargo in Busan	-홍콩 ‘Ocean Pearl International Marine Co.,Limited.’ 소유의 선박 ‘AN HAI 6’호가 부산항 출항 한 달 만에 남포항을 방문했다는 선박추적자료가 나타나, 남한에서 북한으로 직행한 것으로 의심 -‘AN HAI 6’호는 5월 중순 중국 뤼양에서 부산항에 입항, 화물을 선적하고 5월 18일 출항 -‘AN HAI 6’호는 중국 다롄항으로 항해할 예정이었으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에 따르면 도중 항로를 변경, 5월 23일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진입 후 AIS 신호 전송을 중단. ‘AN HAI 6’호는 5월 27일 남포항 5.4km 지점에서 다시 등장 -단정할 수 없으나 비정상적 운항 경로 등을 고려하면, ‘AN HAI 6’호는 부산항에서 남포항으로 직행한 것으로 추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 1718(2006)은 북한 도착·출발 및 북한이 중개하는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경우 화물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

북한 수산물

김정은 시대 수산업,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 상 용

(데일리NK 공동대표)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시장의 융성과 더불어 부상했던 북한 수산업도 코로나 시기에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단행한 국경봉쇄와 더불어 이동 통제로 인해 관련 산업도 타격을 받은 셈이다. 다만 주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업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수산물이 주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연근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수산물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설정하며 중국과의 무역 교류에도 힘썼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 최고지도자의 물고기 선물을 선전하는 경우가 늘었다. 쌀 배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당국이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배급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라고 할 수 있겠다. 수산업 현대화·과학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북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가유일무역제도를 복구(지난 2월 6~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식화)시키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것처럼 수산업 분야에서도 당과 내각의 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수산업의 전략은 무엇이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1. 코로나 이전 상황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산업 분야도 철저히 당국이 관리·통제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즉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선주(船主)들

북한 수산물

뿐이었고, 그것도 철저히 국가기관에 등록돼 있어야 했다.

그러다가 시장화가 진척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보위부 등 공안 기관에 뇌물을 주면 더 쉽게 어업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들이 투자해 수산 관련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처럼 불기도 했었다.

예를 들어 2019년 초반부터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3t, 5t 규모의 고기잡이 선박을 돈주들이 투자해서 건조하는 현상이 포착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소에 예산 및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자력갱생’을 강요해왔다. 기업소들은 당장 국가납부금, 자신의 생활비 및 기업소 운영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꼈고, 돈주를 통해 기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을 꾀하기 시작한 셈이다.

청진의 수산사업 관계자들도 이 같은 방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움직임이다. 돈주를 이용해 고기잡이배를 만들 수 있다면 본인의 사업성과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 만든 고기잡이배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 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상부에 상납금을 바친다면 개인 기업소 설치를 허가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 개인이라도 능력 있고 돈이 있다면 제지하지 말고, 또 국가에 보탬이 된다면 활성화해야 된다고 지속 강조해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분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계약해 상부(국방성, 국가보안성, 인민위원회 등)에 바치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업소 운영이 거의 100%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즉 개인이 인부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자본주의 방식도 성행하곤 했었다. 다만 북한의 특성상 소속된 기관에 속해 조직 생활이 철저히 진행되는 구조는 여전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신흥 부유층으로 성장한 개인들이 국가가 운영하고 있던 수산 사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수산 사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단 국가에서 독점했

북한 수산물

던 수산물을 개인이 판매권을 갖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중국에 넘길 수 있거나 시장에서 잘 팔리는 수산물을 확보하는 기업들의 운영이 활성화 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수산물 관련 북한 내 시장 운영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내 가격 조정 이루어졌다. 즉 항구에 배가 들어와서 물고기를 뿌리면 각 지역에서 온 씨비차¹³⁾들이 시장으로 운반하곤 했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주민들도 적극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비교적 큰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인 수산업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오징어잡이는 다른 어종에 비해 수입이 좋아 조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오징어잡이에 뛰어들곤 했었다.

2. 코로나로 인한 위기

한때 경쟁이 치열했던 수산 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쇠퇴기를 맞았다. 일단 문제는 당국의 코로나 방역이다. 2020년 1월 말 북·중 무역길을 완전히 차단한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상으로도 유입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개인이 배를 띄우는 행위를 금지했다.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에 불과하다. 즉 양식을 주로 하는 주민들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먼 바다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어업증이 있더라도 국가보위성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70% 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2020년 북한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5% 급감한 47만 9000톤을 기록했다. 이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경제 위기 시기였던 1995년(105만 2000톤)보다도 1/2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보면 수산업의 위기라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¹⁴⁾

또한 이동의 통제로 수산물의 전국적인 유통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제 수산업도 갑자기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고 만 셈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국에 배를 늑게(저렴하게) 판매하는 선주들이 많이 늘

북한 수산물

었다고 한다. 심지어 땀감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쌓인 빚을 선박으로 갚으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현재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 수산 부문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즉 국방성 후방총국 산하 기관기업소와 육해공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업선은 코로나 시국이 종결하면 활발히 활용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당국은 군(軍)에 마력이 있는 선박도 제공하고 디젤유도 지속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이는 국가가 모든 물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완벽히 관리·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현상과 결부된다.

즉 군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도 모든 결과물은 국고로 유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충성 계층이 모여 있는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언제든 ‘물고기 선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꾀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시장 공급도 당국이 조절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국가식량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쌀과 곡물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사기업의 쇠퇴와 더불어 개인의 힘을 빼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속 강조하고 있는 ‘수산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생산 성장을 이룩하는’ 데 좋은 방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형태가 지속된다면 과거 협동농장처럼 ‘대충 하루만 때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익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 당국이 그토록 경계하는 양봉음위(陽鳳陰違·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딴마음을 품는다) 현상이 만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인민경제와 직결된 식량 및 부식물에 대한 생산을 늘려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과연 주민들의 돈벌이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택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북한 수산물

(단위 : 1kg, 북한 돈)

번호	날짜	낙지(오징어)				고등어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1	2022. 4. 4	17,800	20,500	15,300	16,800	28,700	31,200	20,500	22,400
2	2022. 4. 17	17,600	20,000	15,500	16,000	28,000	31,000	21,000	23,000
3	2022. 5. 1	18,100	20,500	16,500	16,800	28,400	31,800	21,300	22,400
4	2022. 5. 16	18,400	20,700	16,700	16,500	28,000	31,000	21,000	22,100
5	2022. 5. 30	20,500	20,600	19,000	18,800	20,400	27,800	18,300	18,400
6	2022. 6. 12	18,300	20,500	17,500	17,300	20,000	21,000	19,300	19,400
7	2022. 06.26	18,000	20,000	17,500	17,300	18,600	20,000	18,000	18,100

번호	날짜	꽁치				전어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1	2022. 4. 4	17,100	16,300	17,500	17,700	16,100	14,000	16,400	16,200
2	2022. 4. 17	17,000	16,000	17,000	18,000	16,000	14,200	16,400	16,000
3	2022. 5. 1	18,000	16,500	17,200	17,600	16,500	14,500	16,400	16,100
4	2022. 5. 16	17,200	16,500	17,000	17,300	16,400	14,600	16,300	16,000
5	2022. 5. 30	17,000	15,500	16,200	16,400	15,500	14,000	15,400	15,100
6	2022. 6. 12	18,300	16,400	17,300	17,500	16,000	14,000	16,000	16,000
7	2022. 06.26	18,000	16,000	16,700	16,500	15,000	14,000	15,400	15,700

번호	날짜	송어				바지락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1	2022. 4. 4	14,500	12,900	15,100	15,600	13,100	12,500	12,800	13,200
2	2022. 4. 17	14,800	13,000	15,200	15,800	12,500	12,000	11,300	12,000
3	2022. 5. 1	13,900	12,500	14,200	14,300	12,800	12,600	11,900	12,100
4	2022. 5. 16	12,500	12,200	13,200	13,300	12,500	12,100	11,700	11,800
5	2022. 5. 30	12,900	12,000	12,900	13,300	12,000	11,000	11,700	12,000
6	2022. 6. 12	12,000	11,200	13,500	13,600	12,600	12,000	11,000	11,100
7	2022. 06.26	12,100	11,400	13,000	13,200	12,500	12,000	11,200	11,300

- 13) ‘서비스차’의 줄임말로 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버스, 화물차를 뜻한다. 되거리장사가 유행하면서 서비스차의 물류와 인적 이동이 철도를 능가했었다. 서비스차의 활성화로 식량은 북쪽이 비싸고, 공산품은 남쪽이 비싸던 지역별 가격 차이가 급격히 해소되기도 했다. 또한 정보의 유통과 주민들의 이동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 14) 통계청 편, 『2021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_부문별_ 4. 농림수산업』, (통계청, 2021).